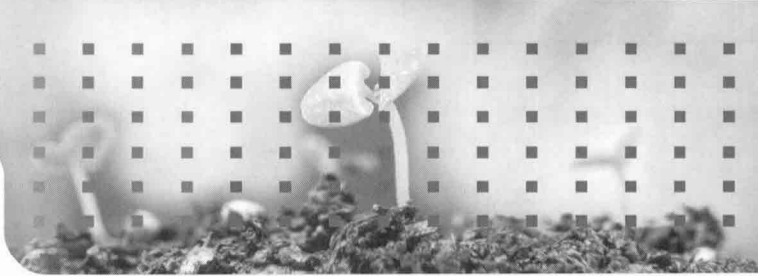


# 지·자·체·소·식



## 광주시, 창업기업에 환경기술 및 행정업무 지원

광주시가 하남산단 등 5개 산단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대기업 환경기술인과 공무원 6명으로 「환경 컨설팅 지원반」을 구성,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인·허가 안내, 환경기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환경 컨설팅제'를 지난 1월부터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광주시의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시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산단 내 신규 입주기업이 2006년 134개, 2007년 297개 업체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광주시가 기업들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련 인·허가 정보지원으로 환경관련 무허가시설 운영으로 인한 업체의 불이익을 줄임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환경 컨설팅 지원반」은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각 업체의 환경시설 운영에 따른 기술과 업체 창업이나 운영 시 반기 1회씩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인·허가 안내 및 행정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하남산단관리공단 등 공장등록기관에 환경관련 인·허가 안내책자 500부를 자체 제작하여 공장등록 시 창업기업에 배부하고, 매년 1월, 7월에 신규 등록업체를 파악하여 무허가 시설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인·허가 안내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와 같은 창업기업 환경 컨설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환경 토타터제)'과 대기업-중소기업간 멘토멘티 체제인 '기업환경 멘토링제'와 더불어 창업기업들에게 창업부터 사업장 운영 시

까지 갈수록 복잡해지고 엄격해지는 환경관련법규와 환경기술 등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저감과 기업 활동 촉진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광주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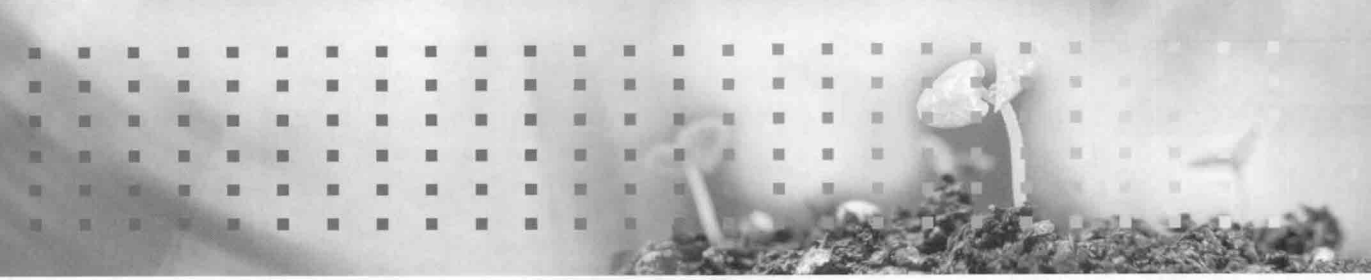
## 대구시, 낙동강 연안개발계획수립 본격 추진



대구시는 새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될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연계하여 대구의 새로운 도약과 대운하 사업성공의 핵심적 역할을 위해 대구 내륙항 및 물류터미널 등 낙동강 연안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울러 개발방안 모색을 위해 사업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구경북 낙동강 운하 포럼」을 경상북도와 협의의 구성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대구지역 낙동강 운하 및 연안개발기본계획에는 대구 내륙항 및 물류터미널 건설(달성군 논공읍 일원 300만평 정도), 첨단산업 중심의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달성군 구지면 일원 300만평 정도)과 낙동강 대운하 일대를 산업, 생태공원, 레



저·스포츠 등 친환경 생태지구로의 개발과 낙동강 주변 산업벨트 간 연계기능과 내륙항 및 물류단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낙동강 연안국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과 운하청 유지의 당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세부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구 내륙항과 물류터미널 건설 예정지는 성서, 달성,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물동량이 가장 많으며, 88, 구마, 중부내륙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이 우수하고 대부분 농경지로서 조성비용 및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반도 대운하의 거점 내륙항과 물류 터미널을 조성하여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컨테이너 집적장, 비즈니스 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년 말 용역비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학계,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20명정도)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기본계획 수립과 인수위(한반도대운하 T/F팀), 건교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의, 대구경북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낙동강 운하 및 연안개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구성하는 T/F팀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간사-정책개발담당관)으로 내륙항 및 물류터미널 등 5개 분야(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첨단 물류산업단지, 낙동강 레저·스포츠 문화지구 조성, 접근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운하 및 주운팀)의 분야별 담당부서장과 관련부서인 대구경북연구원,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여 낙동강 운하 및 연안개발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

해 T/F팀 내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 체결

부산시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부산시(시장 허남식)와 환경부(장관 이규용)간의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철도공사, 16개 구(군), 부산시 투자기관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도 배석했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2013년부터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에 대비해 환경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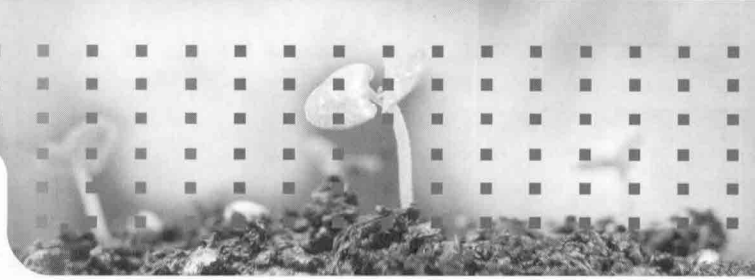
협약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2,371만톤 대비 10%인 237만1천톤을 감축하고, 구·군,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부산시가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 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연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부산시와 상호 협력해 나간다. 앞으로, 부산시는 내년까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환경부로부터 예산과 기술을 지원받아 온실가스저감사업과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분위기를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 대전시, 시정환경순찰 대폭 강화

대전시는 지난 1월부터 환경순찰의 실효성을 강화

# 지자체소식



하기 위해 시기별, 분야별로 순찰대상을 설정하고 자치구와 합동순찰반(6개반 18명)을 편성해 생활현장의 안전과 편익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해빙기를 앞두고 도로침하, 절개지 및 축대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순찰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역·터미널, 주요도로 및 시계지역, 성묘길 결빙지역에 대한 제설과 환경정비 실태 등을 사전점검해 안전한 설 나기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요도로 시설물 관리상태, 보도 및 경계석 정비실태 등 도시기초시설물 분야를 비롯한 교통시설물 관리실태와 대중교통시설 이용 불편사항 등 도로·교통 분야, 공중화장실, 공원·녹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 쓰레기 불법적치 등 환경분야, 각종 건설공사장 주변 안전실태 등 전 생활민원현장을 대상으로 밀착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울산시, 폐영농자재 완전 수거로 친환경 농촌 구현

울산시는 쾌적한 농촌 환경과 농경지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2008년 폐영농자재 수거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농업기반시설물 주변 등을 위주로 울산시 전역을 17개 권역으로 나눠 영농 시작 전 4월과 종기인 11월 권역별 영농폐자재 수거인력을 집중 투입 방침이던 폐영농 자재를 수거기로 했다.

또한 폐비닐 재활용과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회, 작목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폐비닐 40kg을 수거할 경우 새비닐 6.2kg을 교환해 주고 kg당 130원의 장려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잔류농약과 빈병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빈병을 수집할 경우 개당 150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밖에 폐영농자재 장기방치, 의도적 투기행위자 등 폐영농자재 불법투기 단속을 강력 실시, 폐기물관리법(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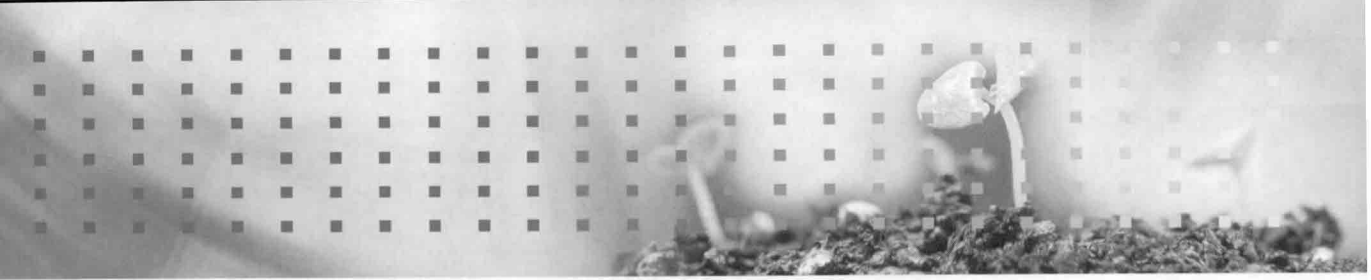
## 인천시, 쓸고 닦고 '5GO' 운동 전개

인천시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5GO 운동' 전개한다. 시는 올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 있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해 5GO 운동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O 운동은 자기집 앞 골목길 쓸고, 쓰레기 줍고, 가로벤치와 휴게시설 닦고, 잡초 뽑고, 불법광고물 떼고 등의 실천지침이다.

이름은 구호의 끝자 '고'를 영어발음과 같은 'GO'로 붙여 만들었다. 시는 3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 중으로 명품시민 5GO 운동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10개 군·구의 대표적 거리를 지정, 내년 상반기까지 150억원을 들여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간판 정비와 상징조형물 설치, 각종 지상 설치물 지중화, 가로등 교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대상 거리는 중구의 동인천역사 주변 및 동구의 송림로터리~재능대학 입구, 남구의 주안역사 앞길, 연수구의 연수구청 앞길, 남동구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거리, 부평구의 부평로, 계양구의 계산새길 일대, 서구의 서구청사 주변, 강화군의 강화대교~군청사 48번국도, 옹진군의 영흥도 영흥대교길 등이다.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이번 시책을 통해 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쾌적



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 경기도, 분뇨 등 오수처리 강화 250억 투입

경기도는 올해 개인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등 오수처리 강화를 위해 모두 2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3일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청에서 2008 오수·분뇨·가축분뇨 관련 주요업무 추진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도 주요사업은 개인하수처리 관련 2개 사업 15,385백만원 분뇨처리 관련 2개 사업 4,495백만원, 가축분뇨관련 5개 사업 5,126백만원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여 관련법률 준수 및 처리시설 점검을 위한 위반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축분뇨 처리농가 워크샵 개최, 도내 개인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분뇨 및 가축분뇨가 고농도의 유기성 폐수로서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이 야기됨을 감안 노후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또한 이천·화성시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개소 350톤/일을 추가 확충해 오는 2012년까지 정부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방침에 대비하고 올해에는 시설이 열악한 1,707개 영세축산농가에 도비 1,121백만원을 지원해 가축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전남도, 해양생물자원 산업화 본궤도

전라남도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해조류 등 해양생물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가 초대 소장 및 팀장 임용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 궤도에 올랐다.

지난 1월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남해안의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해 미래전략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초대 소장에 해양생물분야 전문가로 국립 수산과학원 연구관을 역임한 이창국 박사가 임용됐다.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06억원(국비 50억·도비 25억·완도군 31억)의 사업비를 들여 완도농공단지에 대지면적 9천907㎡, 연면적 3천306㎡ 규모로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10년 Pilot-Plant시설, 창업보육센터 회의실 등 주요시설을 갖춰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는 전남지역이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다양한 전국 제1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산업화 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초대 소장으로 임용돼 센터를 이끌어갈 이창국 박사는 국립 수산과학원 연구관 및 한국해양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 해양생물분야의 권위자다. 또 기술개발팀장에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출신 배상옥 생물화학 박사가 임용되는 등 해양생물분야 전문가들이 센터 전면에 포진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센터는 앞으로 단순 1차 가공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 수산가공업체 수준을 고차가공업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남지역 해양생물산업 육성에 큰 몫을 담당할 전망이다. (☎)